

21세기 미·중·일 안보협력 가능성 : 전망과 대안

김 주 홍

사회과학부 정치외교학전공

<요 약>

근자에 들어 미래 동북아 국제관계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는 지역국가들 간 관계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21세기 미·중·일 삼국의 안보협력 가능성 문제는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개입 및 확대”는 미국 외교정책의 기초로서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일본의 국제정치적 위상 강화, 북한 핵문제에 대한 다자적 해결, 중국과의 갈등적 협력, 혈맹관계를 탈피하는 보다 동등한 한국과의 동반자 관계 등등 냉전 이후 미국의 극적인 정책변화가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는 국제무대에서 정치군사적 위상을 강화하여 심지어 “no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까지 나아가고 있는데, 이는 일본이 그 경제적 능력에 걸맞는 보다 강화된 정치적 지위를 획득해야 한다는 소위 ‘정상국가론’에 명분적 기반을 두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본은 1996년 4월 미·일 안보선언에서 동북아시아의 미국 대리인의 지위를 차지한 것으로 보이며, AWACS, AEGIS, THAAD 등 최첨단 무기체계를 도입함으로써 군사적 능력을 계속 확대시키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이러한 움직임에 대하여 반발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냉전 종식 이후 러시아와 화해를 도모하여 국경분쟁을 종식시켰으며, 러시아와의 경제협력 증진을 꾀하고 있다. 바야흐로 ‘전략적 삼각’의 무게중심이 중국-미국에서 중국-러시아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중국은 군비경쟁은 아닐지라도 일본을 겨냥한 경쟁적인 군비강화에 돌입하였는데, 이는 미국 이후의 동북아시아 지역 국제관계에 대비하고 미·일 간의 묵시적 반 중국 동맹을 견제하기 위함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미·중·일 간의 안보협력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비록 진행 중인 미·러·일 안보대화와 함께 미·중·일 안보대화가 모색되고 있기는 하지만, 미·중·일 삼국 간에는 근본적인 정치군사적 갈등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정책대안은 보다 신중해야 한다. 동북아 지역의 국제정치관계의 불안정성으로 인하여 한국은 현상유지와 현상변경을 동시에 추구해 나아가야 한다. 따라서 “참여 및 균형”이라는 정책기조가 보다 적합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는 한국이 진행 중인 국제적 변화를 활용하고 관련국가들 간의 세력균형에서 바람직한 역할을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내부의 적’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이룩하며 국제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건전한 지도력이 요구됨은 물론이다.

A Prospect of the U. S.-Sino-Japanese Security Cooperation in the 21st Century and Policy Options for Korea

Kim, Joohong
Professor of Political Science

<Abstract>

There are some changes in the relationship among the countries in the Northeast Asia, which seem to affect the future of the international relations in the region. Especially the probable cooperation among the United States, China and Japan in the 21st century would be one of the most interesting and crucial issues. "Engagement and Enlargement" will continue to be the base of U.S. diplomacy, out of which drastic policy options are conceived in the Post Cold War period; strengthening Japanese international "political" position, multilateral approach to the nuclear problem of North Korea, conflictive cooperation with China, more equal partnership with the Republic of Korea other than blood-alliance, and the like. Japan has been trying to upgrade its politico-military position in international arena, even to the stage of "can say no"; the cause is 'a normal state theory', in which Japan should be entitled to get a politically higher position identical with its economic capability. In this context, Japanese government seemed to take over a position of regional manager on behalf of the U. S. at the joint communique in April 1996 and continues to enlarge its military capabilities, adopting AWACS, AEGIS, even THAAD. But China has been reluctant to this change. Chinese government has sought a *rapprochement* with Russia after the end of the Cold War, and reached to an agreement liquidating the border conflict. In addition, China is trying to promote economic cooperation with Russia. The center of mass of 'the strategic triangle' appears to move from China-U.S. to China-Russia. In this atmosphere, China does not hesitate to enter into a competitive armament, not an arms race, against Japan, in order to prepare a post-U.S. era in the Northeast Asia, and to check a tacit *entente* between U. S. and Japan. Thus there is little probability of the three powers' security cooperation. It is because there are fundamental politico-military cleavages among the three, even though a U.S.-Russo-Japanese security dialogue is going on and a U.S.-Sino-Japanese security dialogue is being sought. Then policy options for Korea should be more prudent. The growing international turbulence of the Northeast Asia demands *status quo* and change simultaneously of Korea. So the policy base of "participation and balancing" would be more feasible, in that Korea can take advantage of the ongoing changes and find a desirable role in the balance of the parties concerned. It goes without

saying that a sane leadership is needed to overcome an 'internal enemy', to accomplish a solid national integration and to cope with the international challenge in the region.

I. 서론

'새롭다'는 말에는 희망적인 무엇인가가 내포되어 있지만 불확실한 그 무엇인가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 '탈근대', '지구촌화', '정보화' 등등의 새로운 용어로 표현되는 오늘날 국제관계의 지각변동적 변화는 그러한 의미에서 새롭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국제정치군사관계가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상황 하에서 이미 도래하였거나 또는 앞으로 도래하게 될 국제군사질서의 모습은 자못 궁극증을 더하고 있으며, 흡스직 자연상태에의 유추에 익숙한 정책결정자들이나 또는 세인들에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희망보다 크게 자리하고 있다.¹⁾ 현재 진행 중인 신세계질서의 태동은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에게 상당히 어려운 선택을 강요하고 있으며, 이러한 선택의 강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확실하게 보장될 수 없을 것이다.

동북아는 초강대국 간의 질서 변화를 상당히 늦게 수용하고 있는 지역이다. 초강대국 간의 탈냉전적 질서의 변화가 동북아지역에서는 1990년대 중반 이후에나 반영되고 있으며, 그나마 그 정도가 미미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2-3년 사이에 일어난 동북아 국가들 간의 관계 변화는 이제 본격적인 신질서 구축의 움직임으로 보아도 좋을 현상들이라고 할 수 있는 바, 여기에는 미국과 일본의 밀착, 중국과 러시아의 화해, 한국과 미국과의 갈등, 중국과 미국, 일본과의 긴장, 중국, 러시아와 북한과의 관계소원, 남북한의 갈등 등 관계당사국들간의 관계가 그 이전에 비하여 비약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점이 그 특징이다.

이러한 변화의 근본적인 원인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단다극체제(uni-multipolar system)의 성립과 미국의 유일패권화로 인한 것이다. 미국의 유일패권시대는 전인미답의 경지로서 동북아 지역국가들이 처음으로 경험하는 것인데, 새로운 질서의 정착을 위한 각국들의 주도권 다툼과 이를 위한 국가간 관계의 재정립과정이 함께 진행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국익지상주의가 심화되고 있으며, 가히 '만국의 만국에 대한 투쟁'과도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미국의 새로운 세계전략구상 적용, 미·일 간의 안보관계 밀착, 중·일 간의 경쟁관계 심화, 중·러 간 관계 회복, 미·중 간 경쟁과 협력, 러시아의 새로운 위상 부각 등 각국들 간의 관계가 얽히면서 새로운 균형이 모색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으로서는 동북아 지역에서 유력한 국가들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일본, 중국의 안보관계는 앞으로 어떠한 양상으로 전개될 것인가? 보다 구체적으로 이들 3개국의 안보협력 가능성은 있으며, 그렇다면 어떠한 구도가 성립될 것인가? 이러한 질문이 의미가 있는 것은 한반도 통일을 포함하여 한국의 안보에 이들 3개국의 관계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동북아지역의 새로운 국제질서 태동과정에서 안보협력, 특히 미국, 일본, 중국 등 가장 중요한 국가들 간의 안보협력의 가능성을 전망하고 그에 대한 한국의 대안을 모색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동북아질서는 세계질서의 반영이며, 또한 이는 한반도 질서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우선 새로운 세계질서와 그 안에서 정립되고 있는 신국제안보질서의 특징을 살펴보고,

1) 새로운 질서는 냉전적 양극체제보다 유동적이어서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더 불안정한 것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John Mearsheimer, 'Back to the Future' Instability in Europe after the Cold War, *International Security*, 15/1(Summer 1990), pp. 5-56.

이것이 동북아지역에 어떠한 모습으로 투영되고 있는가를 검토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기초로 동북아 각국들 간의 관계변화와 안보협력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전개될 것이다.

II. 새로운 세계질서의 특징

1. 단위개념의 혼재

냉전기까지 국제정치에 있어서 중요한 행위자는 압도적으로 국가이었다. 기실 이러한 전통은 유럽에서 출발된 것으로서 제도로서, 근대민족국가가 유럽에서 가장 효율적인 단위로서 공고히 되고 이것이 제국주의와 결합하여 유럽 이외의 지역으로 확산되어 정착된 것이다. 이러한 단위로서 국가는 중세의 보편질서와는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최고권, 독립권의 배타적 주권에 기초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보자면 이는 군주가 자신이 지배하는 영지의 종교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에서 출발한 것으로서 현상적으로는 기독교적 일체성의 붕괴에 지나지 않았으나,²⁾ 근대국가의 성립 초기에 보편적 질서 부재에 의한 전쟁의 역사로 인하여 국내정치가 국제정치에 의하여 규정되는 절대위기의 상황 하에서 주권은 가장 편리하고도 보편적인 명분이 되었다.³⁾

그 이후 수세기 동안 적어도 명분적으로는 국가주권은 절대적으로 인정되었으며, 그러한 의미에서 모든 국가가 국력의 다과에 무관하게 또한 명분적으로 평등한 존재로 대우되었다. 제2차세계대전의 종결을 계기로 보다 많은 수의 평등한 근대국가들이 출현하였으며 그들의 주권, 독립은 존중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냉전기의 국가들은 진영별로 국가간 동맹조약에 의하여 결속하고 안보를 유지하였던 것이며, 국가 내외적인 문제는 냉전의 장막에서 안정될 수 있었다.

그러나 냉전이 종식되면서 이러한 안정성은 두가지 방향으로 파괴되게 된다. 그 하나는 당시까지의 단위수준 이하로 근대민족국가가 붕괴되어 가는 힘에 의하여,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러한 국가의 수준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통합되어 가는 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구 소련의 해체에 따른 독립국가연합의 발족, 발틱 삼국의 이탈,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분쟁, 러시아에서 체첸의 분리운동, 체코와 슬로바키아의 분립, 유고 연방의 해체와 이로 인한 보스니아 사태, 소말리아 사태 등은 전자의 예에 해당하며, 이는 주로 정치적인 이유로 인하여 진행되고 있다.

한편 유럽연합의 발족, 북미자유무역지대 창설, 아.태경제협력회의 개막 등은 후자의 그것이다. 물론 유럽연합의 경우는 정치적 통합을 향한 목표도 가지고 있지만, 후자의 경우는 주로 경제적인 이유로 인하여 추동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이유 이외에 동식물 종의 다양성을 전제로 한 생태계의 보존, 수질과 해양의 관리, 오존층 등 대기권의 보호, 남극의 관리, 우주개발 등

2) 근대의 기점에 관해서는 15세기설, 16세기설, 17세기설, 18세기설 등 다양하지만 근대민족국가 체제의 출발이 영토내의 종교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Westphalia조약으로 공식적으로 출발했다는 점에서 17세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관해서는 다음의 연구들을 참조함. 이용희, 『일반국제정치학』(상)(서울: 박영사, 1980), pp. 100-103; F.H. Hinsley, *Power and the Pursuit of Peace: Theory and Practice in the History of the Relations between States*(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3), pp. 153-185; K.J. Holsti, *Peace and War: Armed Conflict and International Order 1648-1989*(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1), pp. 25-34; George Modelski, *Principles of World Politics*(New York: Free Press, 1972), pp. 117-118.

3) 근대국가의 군사적 기초와 이에 관한 역사적 논의에 관해서는 박상섭, “근대국가의 군사적 기초: 근대국가 형성기 유럽의 군사와 정치,” 『정경세계』(1991년 봄호), pp. 281-403 참조.

등 자원 및 환경분야에서 일국 또는 몇개국의 협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전지구적인 문제에 대하여 기능적인 차원의 통합의 모습이 가시화되고 있다.⁴⁾ 특히 이러한 움직임에서 정부간 활동도 중요하지만 비정부기구(NGO)의 활동이 두드러진다. 비정부기구의 활동은 환경, 생태계보호, 인권 및 여권 신장 등에 있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와 같은 국제적 현상들은 모두 기존에 국가를 중심으로 전개되던 영역들이 국가 하부수준이나 또는 국가 상위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세계무역기구의 출범으로 인하여 전지구적 수준에서 국가의 주권이 제약당하는 사태가 근대민족국가체제가 정착한 이래 최초로 나타남으로써 일정한 쟁점 영역에 있어서 국제정치단위로서 국가의 의미는 이전 보다 상당히 퇴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이처럼 단위로서 국가가 한편으로는 분열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통합되어 간다는 것은 그 단위를 지탱하던 물리적 폭력, 즉 군사력을 기반으로 한 정치·군사적 요인이 국제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중요성을 상실하고 있다는 뜻이며, 따라서 민족, 종교, 문화, 인종 등의 분야에서 분열적 요인이 크면 이를 정치·군사적으로 통합을 유지해 내기가 점점 어려워짐을 의미한다. 이는 또한 냉전기까지는 상위정치에 보다 큰 비중이 두어지던 국제관계가 점점 하위정치로 그 비중을 이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국가 단위의 약화는 국가주권의 쇠퇴를 의미하며, 이는 또한 국경의 의미 약화를 통한 자본, 기술 등 자본주의 핵심요소의 이동성이 증가함으로써 국제관계가 권력동기보다는 이익동기에 의하여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권력적 동기가 완전히 포기되는 것은 아니다. 군사안보는 냉전기에 비하여 비중이 낮아졌을 뿐 국가에 의하여 추구되는 핵심적 가치임에는 변함이 없다.⁵⁾

2. 갈등형식의 변화

국제정치 단위의 경계가 모호해 짐으로써 국제관계에서 갈등의 형식은 매우 크게 변화하게 되었다. 냉전기까지 가장 중요한 국제적 갈등의 요인은 이데올로기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과 소련을 양대축으로 하여 자본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으로 양분된 세계는 이념적 기반을 바탕으로 한 대립으로 점철되어 있다. 세계적 수준에서 초강대국의 정치·군사적 대결은 지역적 수준, 국지적 수준으로 투영되어 종적, 횡적으로 맺어진 군사동맹이 보편화되어 있었다. 유럽지역은 북대서양조약기구와 바르샤바조약기구로 양분되어 대립하였으며, 동아시아지역은 쌍무조약에 의한 상호방위체제로 얽혀 있었다. 그 이외의 지역도 다자간, 또는 쌍무적 군사동맹에 의하여 안보가 유지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냉전체제는 양진영 간에는 이데올로기에 의한 정치·군사적 대립이, 각 진영 내에서는 초강대국과 약소국간의 위계질서가 자리함으로서 권력적 동기가 압도적이었다. 따라서 국제적 갈등은 권력적 동기에 의하여 형성되었으며, 그 배후에는 초강대국이, 그 근처에는 이데올로기 자리하고 있었다. 대표적으로 베를린위기, 한국전쟁, 인도차이나 전쟁, 쿠바 미사일 위기, 월남전쟁, 중동전쟁 등이 이에 해당하며, 군비경쟁과 군사화가

4) 특히 환경문제에 관하여 새로운 발전의 개념, 즉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을 중심으로 국제적 레짐에 의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한 연구로는 다음을 참조. the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Our Common Future*(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7), pp. 1-23; Gareth Porter and Welsh Brown, *Global Environment Politics*(Boulder: Westview Press, 1991), pp. 1-33; David C. Korten, "Sustainable Development," *World Policy Journal*, 9/1(Winter 1991-1992), pp. 157-190.

5) 군사안보는 여전히 핵심적 중요성을 갖는다는 견해로는 Paul Kennedy, *Preparing for the Twenty-First Century*(New York: Random House, 1993), chapter 7 참조.

보편적인 현상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권력적 동기에 의한 갈등 양산은 각국의 국내적인 문제, 즉 인종문제, 민족분리주의문제, 종교분쟁문제, 인권문제, 국내정치문제 등을 덮어주는 보호막으로 작용하였으며, 심지어 권력의 정당성을 결여한 독재정권도 이데올로기적 동질성을 표방함으로써 초강대국의 지지를 독하곤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익적 동기에 의한 갈등은 권력적 동기에 의하여 압도될 수 있었다.

하지만 탈냉전의 상황은 권력적 동기의 급격한 위축을 가져왔다. 전지구적 수준에서의 초강대국 간 대립 해소는 지역적 수준과 국지적 수준에서 이데올로기적인 요소를 일시에 제거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유럽에서 바르샤바조약기구가 해체되었으며, 구 공산정권의 동구권 국가들은 북대서양조약기구와 유럽연합에 가입하기 위하여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구 소련은 과거의 동맹국들과의 교역에서 경화결제를 요구하게 되었고, 공산주의 국가들 대부분이 자본주의를 채택한 시장경제 또는 혼합경제 체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그 결과 중국, 북한, 쿠바 만이 기존의 공산당 지배를 근간으로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있으나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는 혼합경제 체제이며, 쿠바도 서방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북한마저도 북한의 정치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미국, 일본을 비롯한 서방국들과의 경제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이는 곧 국제정치에 있어서 이익적 동기가 권력적 동기를 압도하고 있음을 뜻한다.

냉전기간 동안 국제적 갈등은 동서(東西)를 주축으로 하고 남북(南北)이 보조적인 축이 되는 단순한 형태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탈냉전기에는 동서 간의 갈등은 사라졌으며, 동동, 북북, 남남, 남북 등이 한데 뒤얽힌 복잡한 양상을 띠는 갈등형태가 나타나고 있다.⁶⁾ 구 소련 해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간 핵무기를 둘러싼 대립, 아제르바이잔-아르메니아 전쟁, 체코와 슬로바키아의 분립, 유고연방의 해체와 보스니아 사태, 체첸 분리운동 등의 동동갈등은 민족문제, 인종문제, 종교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군사적으로 우월한 미국의 지위로 인하여 서서(西西)갈등은 뚜렷하지 않으나, 미·일 무역마찰, 미국·유럽 자동차 마찰, 엔화 평가절상문제, 멕시코문제 등 선진산업국가들 간의 갈등, 즉 북북(北北)갈등은 주로 경제적 이유에 의하여 빈번히 나타나고 있다. 또한 남북문제는 다국적기업, 경제종속문제, 일반통해제도·상품통합계획·보상금융제도의 세계무역기구 체제 내의 문제 등 고전적인 갈등요인에 부가하여 남북간 투자 및 정부간 원조 문제, 기술이전 문제, 특히 환경문제와 관련된 첨단기술의 이전문제 등 새로운 요인들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냉전의 보호막이 사라짐으로써 그간 이에 의하여 감추어졌던 갈등의 요인들이 일시에 표출되게 되고 이에 따라 나타난 국제갈등형식 변화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환경, 마약, 핵, 인권, 국제범죄 등의 세계적 커넥션이 요구되는 문제들에 있어서는 동서 남북을 모두 포괄하는 갈등이 표출된다. 물론 미국을 비롯한 서방선진국들이 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산업발달수준, 지정학적인 위치 등 특수한 입장에 따라서 각국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는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실험 데이터를 얻기 위하여 해저핵실험을 계속하고 있으며, 남에 속한 국가들의 경우는 환경보다 산업화에 대한 열망으로 인하여 환경을 저해하는 화학산업, 변목산업 등에 적극적이다. 아시아의 황금의 삼각주를 중심으로 한 마약생산기지나, 중남미의 마약생산국의 경우도 정부의

6) 하영선, "탈냉전 군사질서", 하영선 편, 『탈근대지구정치학』(서울: 나남, 1993), pp. 99-101; 김주홍, "새로운 국제군사질서와 동북아 국제정치군사관계," 김주홍 외(공저), 『신국제질서의 도전과 대응』(울산대학교 출판부, 1996), pp. 195-198.

경우와 주민들의 입장이 커다란 괴리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의 경우는 러시아의 핵폐기물 동해 투척에 위기를 느끼며 또한 중국 동북지역의 산업화로 인한 대기오염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결국 탈냉전기 갈등형식은 냉전기 권력동기 일변도의 단순한 동서갈등의 형식에서 동동갈등, 북북갈등, 남북갈등, 동서남북갈등 등 다변적, 다층적 갈등으로 복잡화하고 있으며, 그 동기도 이익적 성격이 가장 강하지만, 인종, 민족, 종교, 문화 등 비경제적 성격도 함께 나타나는 혼란스러운 형식을 띠어간다고 하겠다.⁷⁾

3. 폭력효용의 상대적 감소

단위 개념의 혼재나 갈등형식의 변화는 국제관계의 쟁점영역이 변화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즉 냉전기에는 군사안보적인 쟁점영역이 여타 분야보다 압도적인 비중을 가지고 있었으나 탈냉전기에는 비군사안보적인 쟁점영역이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지게 되었다.⁸⁾ 이는 대립적인 양대 진영간의 관계가 소멸하면서 냉전의 장막에 가려져 있던 무역, 기술이전, 투자, 자원, 환경, 인권 등 비군사안보적 쟁점영역이 국제관계의 전면에 부각된 데에 따른 것이다. 소련이나 일본의 예에서 보다시피 군사안보영역과 비군사안보영역 중 어느 한 분야에서만 우월한 경우 초강대국의 지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거나 정치적인 지위의 향상을 꾀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치군사적 부문과 정치경제적 부문에서 고른 능력을 가질 경우에만 국제정치적인 영향력이 유지될 수 있으리라는 전망이 가능하다.

이러한 경우 폭력의 행사를 통한 문제해결 방식은 냉전기에 비하여 그 효용이 상당히 감소할 수 밖에 없다. 이는 여러 쟁점들이 그 영역에 있어서 독자성을 점점 강하게 가질 뿐만 아니라 그 작동기제나 해결방식이 개별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책의 우선순위에 있어서도 변화가 초래될 수 밖에 없는데, 냉전기에는 생존과 안보의 문제가 다른 영역의 전제이었기 때문에 정치군사안보 분야의 정책이 우선순위를 점하였으나, 탈냉전기에는 초강대국 수준의 전쟁가능성이 거의 없어졌으며 비정치군사안보 영역의 쟁점들이 중요성을 띠게 됨에 따라 정책영역별 우선순위가 의미를 상실해 간다고 할 수 있다.

폭력의 효용성이 감소⁹⁾하고 있고 쟁점영역이 다양화, 다기화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간의 분쟁이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도 폭력의 우위 또는 행사를 통한 정치군사적 해결과는 다른 양상

7) 그러한 의미에서 Huntington의 문명충돌론적 시각은 제한적이거나 실득력을 가질 수 있다. 이는 Samuel P. Huntington, "The Clash of Civilizations?" *Foreign Affairs*, 72/3(Summer 1993), pp. 22-49 참조.

8) 이러한 의미에서 하위정치(low politics)가 고위정치(high politics)를 대체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Wolfram Hanrieder, "Dissolving International Politics: Reflections on the Nation-Stat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2/4(1978), p. 1280.

9) 폭력의 효용 감소에 관한 여러가지 견해는 냉전 이전부터 존재하였는데 이는 대체로 민감성(sensitivity)과 취약성(vulnerability)으로 구성되는 상호의존의 심화, 국부의 원천이 국내에 있고 국제무역과 투자의 확대에 의하여 영토가 국가가 추구하는 목표에서 제외되는 등 국가목표 수의 감소, 무력을 사용한 경제적인 이익 획득의 불가능 등에 관한 것인데 이는 이익적 동기에 의한 설명방식이다. 또한 권력적 동기에 의한 설명에 있어서도 핵무기에 의한 공포의 균형으로 상호억제가 달성됨으로써 무력의 평화적 사용이 물리적 폭력의 행사를 대체하게 된 점이 지적된다. 이상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함. Lawrence Martin, "The Utility of Military Force," *Adelphi Papers*, no. 102(1973), pp. 14-21; Klaus Knorr, "On the International Uses of Military Force in the Contemporary World," *Orbis*, 21/1(1977), pp. 7-9, p. 16; Robert Keohane and Joseph Nye, *Power and Interdependence*, 2nd ed.(Glenview: Scott, Foresman and Company, 1989), p. 28; Robert Gilpin, *U.S. Power and the Multinational Corporation*(New York: Basic Books, 1975), p. 227; C.A. Murdock, "Economic Factors as Objects of Security," in Klaus Knorr and Frank Trager(eds.), *Economic Issues and National Security*(Lawrence: Regents Press of Kansas, 1977), pp. 70-72.

이 나타나고 있다. 즉 쟁점영역 별로 독자적인 문제해결기제를 갖추게 되며 전문가들의 협의를 통한 회의방식이 빈번하고 있는 바, 이는 무역, 금융, 환경, 해양, 자원, 우주, 문화 등의 영역에서 보편화되고 있다. 더욱 중요한 점은 정치군사적인 쟁점영역에서조차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것이다. 걸프전 수행방식을 보자면 미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지만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서방국가들이 국제연합의 결의안을 명분적 기초로 하여 군사적, 경제적으로 부담을 공유하였으며, 소련과 미국 간에도 정책의 방향과 속도를 조절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는 보스니아 사태, 소말리아 문제, 북한 핵문제 등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따라서 마야호로 국제정치는 '춤추지 않는' 회의체방식(concert style) 또는 강대국협조체제(a concert of powers)¹⁰⁾에 의하여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회의체 방식이 과거 냉전기의 문제해결 방식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초강대국 또는 강대국들의 영향력이 크게 줄었다는 것이다. 회의체방식이란 거기에 참여하는 국가들의 동등한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는 한 유지되기 어려우며 정책결정과정의 다층화되기 때문에 일개국 또는 소수의 국가들만의 합의로 결론을 이끌어 내기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과거에 비해 이해당사국들의 견해가 다각도로 검토될 수 있는 기회는 많아지게 된다. 이에 따라 강대국의 경우 약소국들의 협력을 구할 수 밖에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폭력의 현재화는 더욱 신중하게 되는 것이다. 1990년 그리스에서 개최된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담 시 미페랑 프랑스 대통령에 의하여 제기되었던 유럽문제의 유럽화를 중심축으로 한 미국과 유럽국가들의 갈등이나 북한 핵문제 해결과정에서 중국이 주장한 미국 무력사용 자제론 등은 이러한 예에 해당한다.

결국 탈냉전기의 새로운 질서는 전통적인 국가개념의 약화, 국가간 갈등양상의 변화, 폭력효용의 감소 등의 특징을 나타내며 현재까지는 자유무역과 비핵화의 구체적인 모습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III. 신국제안보질서의 특징

1. 국제안보체제의 일극성

냉전체제는 미.소를 양축으로 한 양극체제였으며, 특히 군사적으로는 양극성이 더욱 심하였다. 즉 미국과 소련이 전세계 핵무기의 90% 이상을 독점하고 있었으며 해외군사력 투사능력, 우주개발능력 등에 있어서 타의 추종이 불가능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냉전체제는 Pax Americana와 Pax Sovietica의 공존체제로서 Pax Russo-Americana일 수 있었다.

그러나 탈냉전기의 국제군사체제는 일극체제라고 할 수 있다. 구 소련이 붕괴하여 발틱3국 등은 분리되었으며, 그 이외의 국가들의 경우도 독립국가연합이라는 느슨한 형태의 연합체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거의 독자적인 노선을 모색하고 있는 만큼 구 소련의 상당 부분을 계승한 러시아 만이 미국과 견줄 수 있는 정도이다. 러시아의 경우 군사력은 상당히 약화되어 있으며 특히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도입한 혼합경제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미국과의 군사적

10) Richard Rosecrance, "A New Concert of Powers," *Foreign Affairs*, 71/2(Spring 1992), pp. 64-82. 여기서는 전쟁의 방지에는 강대국 간의 합의가 필수전제인데, 현재의 국제정치에서 1815년 이후의 Concert of Europe과 같은 협조체제가 형성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대립의 강도는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군수산업의 민수전환, 국가경제의 곤란으로 인한 군비축소 등으로 군사력은 상당히 약화되어 있으며, 국내문제 해결이 시급한 과제인 만큼 국제 군사체제의 일극을 형성·유지할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구 소련의 붕괴로 인한 군사적 힘의 공백상태는 또 다른 대체세력인 중국이 개혁을 통한 경제발전을 추진하고 있는 관계로 이를 배우고자 하는 의사와 능력을 결여하고 있었고 일본이나 유럽국가들도 미국과 군사적 대립관계를 형성할 이유가 없었으므로, 미국에 의하여 세워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였다.

그 결과 국제적인 군사적 위기나 국가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데에 미국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그 이전보다 더욱 커지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외형상 Pax Americana가 도래하였고 앞으로 이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도 이미 국제군사적 위기를 독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포기한지 오래이다. 그렇기 때문에 걸프전 이후 거의 모든 국제 분쟁에 있어서 유럽국가들, 일본, 러시아 등의 협력을 구하고 있으며 국제연합이 그 매개가 되고 있다.

결국 군사적으로 일극체제인 탈냉전 질서는 극국가의 경제적, 군사적 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극국의 주도가 아닌 다국적 협력에 의하여 유지되고 있는 아이러니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다만 북한 핵문제와 같이 탈냉전기의 핵심적인 군사질서의 요체를 보호하기 위한 위기에 관해서는 미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경향이 강하다.

그렇다면 군사적으로 일극체제이면서 실제적으로는 다국적 협력에 의하여 유지되는 탈냉전 군사질서는 어떠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인가. 이는 체계의 안정성과 연관되는 중요한 문제로 생각된다. 국제체제의 성격에 따른 체계의 안정성 논의¹¹⁾는 이미 진부한 것이기는 하지만 불확실성이 전례없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고찰은 중요하다.

경제적인 측면에 대한 논의는 유보하고 군사적인 측면 만을 보자면, 탈냉전 질서는 다극적인 균세(balance of power)로 나아갈 가능성이 일단 크다. 그 이유는 미국의 힘이 냉전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나 절대적으로 강해지고 있는 것은 부인하기 어려우나 그 힘이 군사적인 성격은 아니며 또한 미국 스스로가 국제경찰역할을 담당하기를 부담스러워 하는 모습이 수시로 포착되고 있어서 이미 미국이 능력과 의지 모두를 결여 내지 포기하고 있다는 판단에 있다. 그리고 지역 별로 군사력의 운용을 담아낼 수 있는 구도가 정착되어 가고 있다. 이미 유럽지역에서는 북대서양조약기구를 중심으로 한 다자간 안보체제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심지어 과거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들이나 러시아까지도 이 체제에 편입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NATO의 경우 독일-프랑스를 축으로 한 정치군사적, 경제적 힘이 미국과 연계되어 있어서 지역안정과 국제분쟁 해결에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보스니아 사태에 독일 공군이 출격함으로써 독일에 대한 알타체제의 군사적 족쇄는 사실상 종식되어 유럽국가들의 군사적 역할 증대가능성을 전망할 수 있다.

러시아는 Pax Sovietica를 포기하였지만 군사적으로 여전히 강대국이며 특히 핵무기에 있어

11) 양극체제의 경우는 초강대국이 전쟁을 회피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게 작용하게 되어 전쟁이 억지될 수 있으며, 다극체제의 경우는 다수의 강대국들간의 관심의 분산을 통하여 체계의 안정이 보장될 수 있다는 기존의 주장들은 나름대로의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전쟁의 억지는 체계의 성격보다는 국제행위자의 의지를 달성하기 위한 의지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견해를 취하는 연구가 보다 많은 지지를 얻고 있어 체제 그 자체만으로 체계의 안정성을 판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앞의 대립적인 견해에 관해서는 Kenneth Waltz, "The Stability of a Bipolar World," *Daedalus*, 93(Summer 1964), pp 903-905; Karl W. Deutsch and David Singer, "Multi Power System and International Stability," *World Politics*, 16(April 1964), pp. 390-406 참조.

서는 충분성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과의 전쟁가능성은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으며, 러시아의 핵충분성은 전쟁억지력을 구성하고 있다고 하겠다. 중국의 경우도 군사력이 계속 증강되고 있고, 특히 해군력 강화를 위한 계획에 따르면 연안해군에서 대양해군으로 변신하기 위한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경제발전으로 인한 부의 증가로 년 15% 대의 군사비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는 중국은 소련과의 관계정상화를 통하여 북방지역의 안보부담을 해소하고 일본에 대한 군사적 균형세력으로서 의미를 더해가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앞서 언급한 국가들과는 사정이 다르다. 일본은 전후 평화헌법에 의하여 정치군사적 위상은 제약당하였으나 오히려 미국의 세계전략과 그에 따른 안보무임승차에 힘입어 정치경제적 위상은 현저히 상승하였는 바, 냉전의 최대수혜국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은 탈냉전기에 있어서는 그간의 경제발전과 기술수준에 걸맞는 정치군사적 위상을 추구하고 있다. 즉 국제연합 평화유지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든지,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을 모색한다든지, 초고속증식으로 개발이라는 과학발전의 명분을 내걸기는 하였지만 막대한 양의 풀뿌토늄을 확보한다든지 등은 일본의 정치경제적 목표가 무엇인지를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no라고 말할 수 있는 일본'이나 소위 '정상국가론'(normal state)라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 다아 있는 것으로서 일본 내의 보수우익세력의 향배에 따라 그 양상이 결정될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일본의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위정치를 뒷받침하는 정치군사적 능력이나 위상이 한계를 가지고 있다. 세계 제4위의 군사대국이기는 하지만 군사적으로 미국의 영향력을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며, 중국과 러시아에 의하여 상당한 견제를 받고 있다. 따라서 경제력을 군사력으로 전환할 의사와 능력을 동시에 갖추고 주변국과의 마찰을 감수하지 않는 한 일본이 군사강대국의 지위에 도달할 수 있는 지는 아직 의심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볼 때 탈냉전 군사질서는 형태상으로 미국 중심의 일극체제이기는 하지만 유럽과 아시아 주요국가들의 지역적 역할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걸프전, 소말리아 사태, 보스니아 사태, 북한 핵문제 등 유무형의 군사력이 동원되는 국제적 갈등과 위기 시 아시아와 유럽 주요국들의 협력은 문제해결에 필수적이며 이는 국제연합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초강대국과 주요국들 상호간의 충돌가능성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낮아졌으며 그러한 의미에서 군사적 일극체제의 안정성은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그러한 의미에서 또 다른 '오랜 평화'(the Long Peace)¹²⁾의 가능성을 전망하는 것도 어느정도 가능하다.

한편 지역적, 국지적 수준에 있어서 충돌과 분쟁 가능성은 높아지는 역설을 볼 수 있다. 기아와 종족분쟁으로 인한 아프리카 대륙의 비극은 근대유럽 국제정치의 산물이기는 하지만 아직도 내연하고 있으며, 구 소련이 해체된 이후 수적으로 늘어난 독립국가들 간의 갈등은 전쟁과 내란에 버금가는 상황으로 전개되었다. 이는 구 동구권 국가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또 과거 제3세계 국가들에 있어서도 군사적 갈등의 수준은 높아지고 있다. 중동지역의 쿠르드족 문제를 둘러싼 터키-이라크 간 분쟁, 터키-그리스 간 영토분쟁, 남사군도 영유권 문제를 둘러싼 중국과 주변국 들간의 분쟁, 대만독립문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예들은 불력의 약화로 인한 힘의 공백상태가 군사적 갈등으로 발전하고 있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바, 이들 국가들 간에 발생하게 될 군비경쟁을 비롯한 군사적 갈등은 '오랜 평화'를 전망하는 데에 장애가 될 수 있다.

12) 이 용어는 1985년부터 1914년까지 세계수준의 대규모전쟁이 없었던 시기를 일컫는 것이나, Gaddis는 이를 냉전기 동서진영 간의 전쟁부재라는 구조적 변수로 설명한다. John L. Gaddis, *The Long Peace: Inquiries in the History of the Cold War*(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7), chapter 8 참조.

2. 안보개념의 확대·변질

냉전기까지 안보개념은 통상 정치군사적으로 규정되어 왔으며 ‘전쟁의 그늘’(the shadow of war)¹³⁾이 항시 선제되었다. 즉 국가의 주권과 독립의 유지, 영토 보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가 안보의 핵심이었으며, 안보에 대한 위협도 국가의 생존과 직결되는 것으로 인식되었고, 안보추구방식도 이러한 위협에 대한 억지력을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따라서 군사력은 가장 중요하고도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었으며 국가 간의 정치군사관계가 국제정치의 대부분을 규정하게 되었다.

하지만 냉전이 종식됨으로써 그 이전까지 국제정치에서 전제되던 초강대국 간 또는 블릭 간의 전쟁가능성이 거의 없어지게 됨에 따라 그 간 냉전의 장막에 가려져 있던 여러가지 쟁점들이 국가간의 주요관심사로 부각되게 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 하위정치로 치부되던 영역에 속하던 문제들이 국제적으로 심각한 쟁점사안이 되었고 그에 따라 안보의 개념도 확대되게 되었다.

이러한 안보개념의 확대에 영향을 있는 요인들을 무연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안보에 대한 위협의 내용이 변화하였다. 핵무기가 등장함으로써 초강대국 간, 또는 주요국들 간의 전쟁가능성은 인류의 절멸을 전제하지 않으면 상상할 수 없게 되었는데, 이 ‘질대무기’는 절대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무기였던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전략자원의 부족, 자원수송로의 보호, 환경문제의 심화, 기술발전으로 인한 정보화의 진전, 종교, 전통 등의 문화적 요소의 보존 등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국제분쟁의 비중이 커지게 되었으며, 군비경쟁과 같은 경쟁적 방식에 의한 안보추구에서 중요한 군사적 수단이 국가이익과의 밀접한 상관관계가 점점 약화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국내정치, 경제, 사회문제의 중요성(primacy of domestic politics)이 부각되게 되어 국내정치개혁, 경제기술협력, 문화적 교류의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둘째, 안보에 대한 위협의 내용이 변화하게 됨으로써 그 추구방식에도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다. 냉전기까지는 일방적이고 경쟁적인 방식에 의하여 안보의 증진을 꾀하였는 바, 이는 국가안보정책의 기초가 협력보다는 ‘배반’에 있어 ‘수인의 고민’이 보편화하게 된 것이다. 국가가 안보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배반을 택하는 이유는 국제무정부 상태에서 배반을 택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상대가 협력할 경우 자국이 배반함으로써 상대적 이익의 격차를 최대화하고자 하는 공격적 이유가 있기 때문이었다.¹⁴⁾ 그러나 끊임없는 배반의 결과로 안보딜레마(security dilemma)는 강화되었고, 초강대국은 그 배반의 하부구조, 즉 경제에 상당한 부담을 지게되었으며, 따라서 그러한 배반은 더이상 지속될 수 없었다. 국가간 체계 외부로부터의 제재는 없었으나 배반의 댓가가 너무 크게 되었다. 이에 따라 안보추구방식이 상호적이고 협력적으로 변화하게 된다. 즉 국제무정부 하에서도 배반으로 인한 부담이 커지면서 배반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게 되어 상위의 규범이 없더라도 협력의 가능성이 커져 ‘수인의 고민’은 ‘미래의 그늘’(the shadow of the future)¹⁵⁾에 의하여 극복될 가능성이 어느정도 엿보이는 국면이다. 상대방의 안보를 증진하는 경우 그것이 자국의 안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선택의 방식이 변화한 것이다.

13) Raymond Aron, *Peace and War*(New York: Doubleday, 1966), p. 6.

14) Glenn Snyder, "'Prisoner's Dilemma' and 'Chickens' Models in International Politics,"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15/1(1971), p. 68.

15) Robert Axelrod, *Evolution of Cooperation*(New York: Basic Book, 1984), p. 12. '미래의 그늘'이 클수록 국제무정부 하의 협력가능성이 커지는데, 여기에는 상호작용이 오래 지속되고 또한 그 빈도가 잦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계, 안보문제의 다차원화이다. 과거 냉전기에는 안보문제가 국가수준에서 그것도 정치군사적인 영역에 집중하여 나타났으나, 이제는 개인적 수준, 국가적 수준, 국제적 수준에서 동시다발적이고 중첩적으로 제기되어 개인안보, 국제안보, 공동안보 등의 개념들이 새로이 규정되게 되었고, 자원, 경제, 환경 등의 영역에까지 안보의 개념이 확장되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하여 안보의 개념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국가는 과거 국가수준의 안보 뿐만 아니라 새로이 등장하고 있는 확장된 차원과 영역의 안보를 포괄적으로 관리,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보다 유연하고 총체적인 안보정책을 수립해 나아가야 한다.

안보개념의 확대로 인하여 안보추구방식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전술하였는 바, 정치군사적인 측면을 고찰해 보면 변화의 정도가 뚜렷해진다. 안보문제에 관한 전통적인 해답은 동맹과 집단안보라고 할 수 있다. 동맹, 즉 군사동맹은 균세(balance of power)에 입각한 안보추구정책으로서 개별국가가 독자적으로 역지를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위협대상국가에 대항하는 타국과 동맹함으로써 안보를 증진하는 방식이다. 여기에는 양자동맹과 다자간 동맹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어떠한 경우이든 상대측의 안보를 상대적으로 약화시키는 것이기도 하여 군비경쟁이 보편화되었다. 이에 비하여 집단안보(collective security)는 보편적인 국제기구의 강화를 통하여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전쟁을 억제하며 침략국가에 대하여 공동으로 제재를 가함으로써 국제적 안전, 또는 모든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는 방식인데, 국제연맹과 국제연합의 예에서 알 수 있다시피 그 실효성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전통적인 방식은 핵무기의 발명, 냉전의 경험, 탈냉전으로 인한 국제적 갈등양상의 변화 등 여러가지 이유에 따라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되게 된다. 상호안보(mutual security), 공동안보(common security), 협력안보(cooperative security) 등의 새로운 용어가 이와 같은 변화를 상징하고 있다. 위의 세가지 용어는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개념이지만 시기별로 미묘한 차이를 나타낸다.

아마도 공동안보가 가장 먼저 소개되었는데, 1980년대 초의 소위 *Palme Report*¹⁶⁾에서 연유한다. 이는 어느 일국가도 자국의 군사력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과 억지력 만으로는 자국의 안보와 평화를 달성할 수 없으며, 단지 상대국들과의 공존공영을 통해서 국가안보를 달성할 수 있다는 논리를 담고 있으며 다자간의 외교 또는 협의체를 통한 신뢰구축에 초점을 둔 개념이다. 한편 협력안보는 전쟁예방적 차원에 보다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개념이다. 즉 각국가간의 군사적인 대립관계를 청산하고 협력관계를 설정함으로써 상호 양립가능한 안보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쟁예방을 위하여 국가간에 합의된 조치들을 이행하고 침략수단의 총동원을 적극적으로 억제하는 조치들을 추구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¹⁷⁾ 이에 비하여 상호안보란 보다 구체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바, 이는 양자간의 안보를 의미한다.¹⁸⁾ 원래 *Palme Report*가 출판된 이래 공동안보와 상호안보가 혼용되어 왔는데, 이는 동서 양진영간의 안보를 상호안보로 그리고 모든 국가의 안보를 공동안보로 구분하여 사용되어 왔지만 냉전이 지배하던 세계에서는 상호안보가 또한 공동안보를 구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16) Independent Commission on Disarmament and Security Issues(세칭 *Palme Commission*이라고도 함), *Common Security: A Blue Print for Survival*(New York: Simon and Shuster, 1982).

17) Ashton B. Carter, William J. Perry, John D. Steinbruner, "A New Concept of Cooperative Security," *Brookings Occasional Papers*(Washington D.C.: The Brookings Institution, 1992), pp. 7-10.

18) R. Smoke, "A Theory of Mutual Security," in R. Smoke & A. Kortunov(eds.), *Mutual Security: A New Approach to Soviet-American Relations*(Hampshire: Macmillan and Academic Professional Ltd., 1991), p. 60.

내용적으로 볼 때, 상호안보에서 공동안보로 그리고 협력안보로 안보의 개념이 변질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그 어떠한 것이든 각에 과거 냉전까지의 일방적이고 경쟁적인 방식에서 상호적이고 협력적인 방식으로 접근법 자체가 변화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1980년대 후반부에 등장한 고르바초프 정권의 신사고외교, 그리고 그가 제안한 '유럽공동의 집' 구상, 블라디보스톡 선언이나 크라스노야르스크 선언에서 주장한 아시아집단안보 구상 등은 이러한 개념에 입각하고 있었으며, 구체적으로 유럽안보협력회의(CSCE)의 확대발전, 겔프전 당시 미·소와 유럽국가들의 협력, 북한핵문제 처리과정에서 유관국들의 공조 등이 그 예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 더욱 강화될 전망이며 정형화된 국제기구는 아니더라도 다양한 안보 레짐이 출현할 가능성이 크다.

3. 군비축소와 군비증강의 이중구조

일국적 다국체제의 도래와 이에 따른 상호적, 협력적 안보추구의 보편화는 현실적으로는 군비축소와 통제에 형태로 나타난다. 이는 물론 상대방에 대한 시각의 변화 결과로서 이 과정에서 국가간의 갈등, 특히 군사적 갈등을 다루는 방식이 변화하였음을 의미한다. 즉 냉전이 종식되어 가는 과정을 보면 미·소가 그 이전에 군사력의 수적 우위에 집착하던 태도(bean-counting)에서 벗어나 먼저 신뢰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무기체계와 병력수를 통제하는 방식을 취하였으며, 이는 특히 그들에게 사활적 중요성을 가진 유럽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INF, START, CFE 등의 타결과 SNF의 철수는 이러한 경향을 대표한다.

반면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군비가 경쟁적으로 증강되고 군사력 행사가 빈발하고 있다. 주로 구 소련지역이나 동구권지역의 경우는 군사적 충돌이 빈발하고 있으며, 중동·동아시아·아프리카 지역에서는 군비가 증강되고 있다. 특히 중국과 일본처럼 지역패권국가를 경쟁적으로 지향하는 나라들의 경우는 군비경쟁의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결국 새로운 국제군사질서 하에서는 전지구적 수준에서 군비축소가 보편적인 현상이기는 하지만, 지역적·국지적으로는 군비증강 또는 군비경쟁 그리고 군사력 행사가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호 모순적인 움직임은 세계적 수준에서 힘의 균형상태가 급격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서 새로운 국제질서가 구체적으로 정착되기까지 계속될 것으로 생각된다.

IV. 미·중·일·러의 변화

앞서 언급된 새로운 세계질서의 특징들은 동북아지역에도 반영되고 있다. 미국의 유일패권 하에서 동북아지역 국가들의 지역적 비중이 커지고 있으며, 안보의 개념도 군사안보적 차원에서 비군사안보적 차원, 즉 경제, 환경 등의 차원으로 확산되고 있다. 또한 일방적인 안보추구방식이 양자간, 또는 다자간 상호적인 방식으로 점차 변화되고 있으며, 군비의 질적 강화와 양적 감축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군사력이 강화되고 있는 중국과 일본에 대한 우려에서 주변국들의 군사력이 강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동북아 각국들의 정책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미국

미국은 탈냉전을 주도하면서 세계적인 규모의 군비축소를 통하여 미국의 군사비를 상당부분 감축함으로써 경제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데에 성공하였으며, “개입 및 확대”(engagement and enlargement)를 정책기조로 하여 미국의 안보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다. 미·소 간의 탈냉전 선언 이후 Bush 행정부는 경제회복에 정책의 우선성을 두고 해외미군의 단계적 감축과 철수, 그리고 그에 따르는 국방예산의 삭감을 통하여 이를 달성한다는 입장에서, 미군 주둔 국가의 비용분담 증액과 미국 주도의 쌍무적 또는 다자간 합의를 통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를 달성해 가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소정의 목적을 달성한 바 있다.¹⁹⁾ 한편 Clinton 행정부에 들어와서는 Bush 행정부의 감축경향을 현상유지로 전환하여 기본적 전략을 ‘개입 및 확대’로 전환하여 미국 이익 우선주의를 강화하고 있다.²⁰⁾ 즉 미국 행정부는 세계경제의 1/3을 점하고 있는 아·태지역의 경제와 안보는 미국의 경제에 중요하며, 이 지역의 평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미국의 기지 및 군사력을 유지하고, 중국과 적극적으로 경제적, 군사적 협력을 추구하며, APEC과 ARF에 참여케 하여 다각적으로 견제하는 한편, 미·일 안보체제를 기본축으로 하여 양자간, 다자간 안보대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신태평양공동체의 구현, 대량파괴무기 확산방지를 위하여 북한의 핵개발 저지와 한반도 비핵화 정책을 고수하는 것을 그 기본으로 하고 있다.²¹⁾

이러한 흐름 속에서 미국의 동북아 전략의 핵심은 미·일관계와 미·중관계에 있다. 현재 동북아지역에 있어서 미국의 전략운용 대상국 중 제일은 중국이다. 특히 최근 미국을 방문한 장쩌민 중국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클린턴 미 대통령은 대 중국정책의 골간이 대립 및 봉쇄가 아니라 개입에 의한 확대전략이 될 것임을 분명히 한 바 있으며, 1998년 봄에 북경에서 열릴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한층 강화될 것이다. 즉 6.4 천안문 사태 이후 미국의 대 중국정책은 대결정책이었다. 인권문제를 들어 중국에 대한 제재를 단행하였으며, 특히 중국의 파키스탄에 대한 미사일 수출 혐의로 중국에 대하여 일반특혜관세 적용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취하는 등 갈등정책으로 일관하였다. 그러나 이번 미·중 정상회담으로 인하여 갈등관계보다는 협력적 경쟁관계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 미국의 의도인 것으로 보인다.

그와 동시에 미국은 미·일 안보협력관계를 강화함으로써 동북아지역에 있어서 일본을 미국의 대리국으로 활용하고 중국과 균형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보장장치를 강화하고 있다. 즉 미·일 공동으로 THAAD (Theater High Altitude Air Defense)를 개발하는 계획을 추진하여, 중국으로부터 안보위협에 대한 반발을 불러일으킨 바 있으며, 1996년 4월의 미·일 신안보선언과 1997년 9월의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으로 동북아지역에서 일본의 군사적 역할을 확대시켰다. 여기에는 기존의 미·일 동맹관계를 기반으로 일본의 위상을 미국 쪽에

19) 이러한 정책은 ‘동아시아 전략구상’에 반영되었는데, 미군 철수가 유보된 것은 북한핵문제 때문이었다. 이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 U. S. Department of Defense, *A Strategic Framework for the Asian Pacific Rim: Looking toward the 21st Century*(Washington, D.C.: GPO, 1990); ---, *A Strategic Framework for the Asian Pacific Rim*(Washington, D.C.: GPO, 1992).

20) Clinton 행정부는 탈냉전 시대의 위협을 재평가하여 핵무기와 대량파괴무기에 의한 위협, 지역적 불안에서 오는 위협, 구소련과 기타 지역에서 민주주의 실패로 인한 위협, 미국의 경제력 약화로 인한 안보위협을 그 핵심으로 규정하였다. U. S. Department of Defense, *Report on the Bottom-up Review* (Washington, D.C.: U.S. GPO, October 1993), pp. 1-2.

21) U. S. Department of Defense, *Annual Report*(Washington, D.C.: U.S. GPO, March 1995), chapter 1, “A New Strategy for a New Era.”

밑착시켜 안보노력을 분담시키려는 계산과 함께, 중국에 대한 견제에 일본을 동원하고자 하는 의도가 깔려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이 유일 초강대국으로서 동북아 지역강국 간 견제구도를 확립하고, 동시에 과거와는 달리 세계 최강국의 위상에 걸맞지 않게 비용과 희생은 회피하고자 하는 국가이기주의의 발로이며, 정복자·지배자의 입장보다는 중재조정자의 입장에서 동북아의 안보관계를 관리해 나아가겠다는 입장의 표명이라고 하겠다. 물론 이는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초강대국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며, 미국 유일패권의 현실적 의미가 미국의 국가이기주의 강화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의 전략적 지향점은 무엇인가? 이는 정치군사적인 고립주의 노선으로의 복귀라고 할 수 있다. 이는 Nixon대통령에 의하여 천명된 정책방향이었으며, 미국에게 대직할 수 있는 초강대국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 하에서 미국이 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정치군사적인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경제적인 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건을 미국은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²²⁾

2. 중국

중국의 안보전략적 입장은 미국과의 일대일 관계를 정립하여 초강대국의 지위에 오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949년 정권 수립 이후 중국은 사회주의체제 확립을 위한 내치에 주력하면서 ‘죽의 장막’ 뒤에 은둔하고 있는 존재였다. 그러나 중·소 이념분쟁이 격화되고 특히 브레즈네프 독트린이 발동된 이후 소련을 사회주의 패권국가로 규정하고, 이를 견제하기 위하여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모색하여, 1971년 UN 가입과 1972년 중·미 국교수립을 계기로 국제무대에 복귀하였으며, 1980년대 이후 덩샤오핑 집권기간 동안 현대화계획을 추진하면서 미국, 일본 등 서방국가들과의 관계를 심화시켰다. 그 이후 1989년 6.4 천안문 사태로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되어 동북아 국가들과의 관계가 상대적 냉각기로 들어갔으나, 1990년대 들어 러시아와의 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특히 1997년 9월 제15차 중국공산당 전당대회(15전대)와 10월의 중·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21세기 초강대국을 향한 국제관계 활성화의 단계로 들어가고 있다.²³⁾ 특히 15전대에서 차오쓰블 중심으로 한 보수파를 제압한 장쩌민 체제는 소위 ‘사회주의시장경제’를 강화하면서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치군사적 초강대국의 위상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구상을 실현해 가고 있다.

중국은 군 현대화를 통하여 기술군 체제를 확립하면서 병력은 감축하는 경제적 체제를 갖추어 가고 있다. 1980년 당시 430만의 군대를 보유하고 있던 중국은 1985년-86년에 100만에 가까운 병력을 감축한 바 있으며,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감축해 오고 있다. 특히 15전대에서는 향후 50만의 추가감군안이 채택되었다. 이러한 병력수의 감축은 급속한 경제발전의 기초한 년

22) 강성학, “한반도 주변 전략환경과 미국의 역할 - 미국은 시이저인가 아니면 이야고인가?,” 『한국정치학회보』, 제30집 3호(1996 여름), pp. 265-286.

23) 경제적인 면에서 21세기에 중국이 미국을 앞서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적이 있다 즉 2002년 경 홍콩, 대만을 포함한 중국의 경제력은 미국을 앞설 것으로 평가되었는데, 세계은행의 추정자료에 의하면 세계교역에 있어서 6390억 달러, GNP에 있어서 9조 8천억 달러로 세계교역에 있어서 일본의 5210억 달러, GNP에 있어서 미국의 9조 7천억을 상회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물론 중국 본토만을 계산한다면 이보다 훨씬 못한 결과가 나오겠지만, 10%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중국의 경제적 잠재력은 가늠할 만하다고 하겠다. 이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할 것. Barber B. Conable, Jr, and David M. Lampton, “China: The Coming Power,” *Foreign Affairs*, 72/5(Winter 1992/93), pp. 133-149; Nicholas D. Kristof, “The Rise of China,” *Foreign Affairs*, 72/5(Winter 1993/93), pp. 59-74.

12-25%에 이르는 군사비의 증가와 소련으로부터 도입을 추진해 온 장거리항공기, 공중급유기, 항공모함, 방공미사일체제, 신형탱크, Kilo급 잠수함, 항공전자설비, 항행체계, 항공기 엔진에 의한 기술력 강화로 보완되고 있다.

중국은 중단기적으로는 경제발전을 가장 중요한 국가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²⁴⁾ 이를 위하여 중국 주변정세의 안정을 안보정책의 근간으로 삼고 있다. 즉 급격한 현상변경에 대해서 분명한 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에서의 전쟁 또는 북한의 붕괴 등 중국에게 부담이 되는 상황은 가능한 한 피하고자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의 외교정책은 '전방위외교'를 지향하고 있으며, 안보정책도 '전방위안보'(defense tous azimuts)로 방향이 맞추어지고 있다.

우선 중국은 러시아와 1991년 이래 다섯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하여 관계개선을 추진해 왔다. 특히 1994년 9월 3일 모스크바 중·소 정상회담에서 아무르강과 우수리강을 제외한 전지역에서의 국경문제를 확정하고 전략무기 선제금지를 합의한 바 있는데, 이는 1997년 11월 10일의 중·소 정상회담에서 재확인되었으며, 전략적 협조관계가 확인되기도 하였다. 또한 중국은 미·일간 1996년의 신안보선언과 1997년의 방위지침개정에 대한 반응에서 나타나듯이 미국과 일본이 연합하여 중국을 견제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의심을 가지고 있지만, 미국의 도움이 없이는 세계무역기구 가입 등 국제무대에서의 활동과 중국 자체의 개혁, 개방노선을 유지해 나아가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 같다.²⁵⁾ 이는 장쩌민 주석이 중·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정상회담의 정례화, 직통전화 개설, 각료급 상호방문 등을 합의한 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일본에 대해서도 THAAD 도입, 신안보선언, 방위지침개정 등에서 보이던 과민반응²⁶⁾과는 대조적으로, 11월 11일 일본을 방문했던 리펑 총리는 민감한 안보문제에 대한 언급은 자제하고 오히려 신뢰와 협력을 강조하는 활동을 보인 바 있다.

결국 중국은 전략적 삼각관계(the strategic triangle)²⁷⁾의 중심을 러시아로 옮겨 미·일을 견제하는 한편, 미·일과의 협력적 견제, 또는 견제적 협력을 유지함으로써 중국의 당면한 경제발전에 필요한 국제안보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 이유는 중국의 현대화정책

24) 중국이 경제도약을 위한 핵심정책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들고 있다. 지역정치,의 활용, 미국의 전략적 의존 및 활용, 이념의 경제실용주의에의 종속, 경제우선정치, 해외기업과 기술도입, 시장경제추진, 국내의 자유경쟁제도 실행, 군비삭감 등이 그것이다. William H. Overholt, *China: The Next Economic Super Power*(London: Weidenfeld & Nicolson, 1993), pp. 216-224.

25) 이러한 중국의 입장은 주한미군 문제에 대한 중국의 태도 변화에서도 엿보이는데, 중국 정부는 미군의 한반도 주둔문제가 한·미 간의 문제로서 간주하는 유연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조선일보』(1997. 10. 7).

26) 중국정부는 미·일의 일본에 대한 THAAD체제 도입 기도에 대하여 분명한 반대의 뜻을 미국 정부에 전달한 바 있다. 일본이 북한의 노동1호에 대응하여 이 방공체제를 도입하는 것이 중국의 전략핵진력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였으며, 만일 미·일이 이를 강행할 경우 중국정부는 전략핵을 강화하여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讀賣新聞』(1995. 12. 6).

27) 이는 1970년대에 중국의 대미화해 정책을 분석하는 개념으로 사용되던 것으로서 상당한 설득력을 가진 개념이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전통적인 중국의 세력균형 정책인 '以夷制夷'로서 중국 외부의 힘에 의한 다른 힘의 균형, 또는 중화중심의 천하의 분할통치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70년대에 뛰어난 연구들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Roger G. Brown, "Chinese Politics and American Policy: A New Look at the Triangle," *Foreign Policy*, 23(Summer, 1976), pp. 3-24; Banning Garrett, "China Policy and the Strategic Triangle," in Kenneth A. Oye, Donald Rothchild and Robert Lieber(eds.), *Eagle Entangled: U.S. Foreign Policy in a Complex World*(New York: Longman, 1979), pp. 228-264; Thomas Gottlieb, *Chinese Foreign Policy Factionalism and the Origins of the Strategic Triangle*(Santa Monica: RAND R-1902-NA, November 1977); Michel Tatu, *The Great Power Triangle: Washington-Moscow-Peking*(Paris: Atlantic Institute, 1970). 또한 개념분석을 위해서는 Lowell Dittmer, "The Strategic Triangle: An Elementary Game-Theoretical Analysis," in Klaus Knorr(ed.), *Power, Strategy and Security*(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3), pp. 37-102를 참조할 것.

의 핵심인 개혁과 개방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와 외자도입 및 수출중대인데, 여기에는 미국의 국제적 협력과 시장제공이 필수불가결하기 때문이며, 또한 일본의 경제력을 이용한 자본도입과 수출확대를 꾀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일본

탈냉전 이후 일본의 국제적 역할은 한층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일본은 냉전기 동안 미국 일변도의 안보정책을 견지하며 안보의 무임승차(free riding)를 향유해 왔으며, 1980년대 중반까지도 이러한 경향이 별다른 이념적 거부감 없이 일본 국민들에게 수용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일본의 경제적 위상이 세계적으로 부각되고 미국과의 무역마찰을 겪으면서 일본 내 보수주의 진영의 목소리가 커졌고, 점차 독자적인 안보정책을 추구해야 한다는 견해가 팽배하기 시작하였다. “NO라고 말할 수 있는 일본”이 되어야 한다는 보수진영의 입장은 경제대국에 걸맞는 정치적, 군사적 위상을 찾아야 한다는 소위 ‘정상국가론’과 해로(Sea Lane)보호를 명분으로 자위대를 강화하고 평화헌법을 개정하여 동북아시아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명실상부한 경제, 정치, 군사대국을 지향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일본의 국내적인 변화²⁸⁾는 탈냉전 및 미국의 세계전략 수정과 맞물리면서 동북아의 지역안보구도를 변화시키고 있다. 신안보선언과 미·일 방위지침 개정은 이러한 변화의 대표적인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1970년대에는 ‘방위정책의 대강’을 기반으로 하여 전수방위에 치중하여 왔던 일본은 막강한 경제력을 배경으로 방위비가 1990년에는 GNP의 1% 수준인 약 300억 달러를 넘어서기 시작하였으며, 1991년-1995년의 신중기방위력정비계획에 의하여 매년 3%의 실질 방위비 증가를 확보하여 신형 90형 탱크, AEGIS함, F-15기, AWACS기 등 첨단무기체계를 강화하였으며, 1996년부터 2000년까지의 2기 신중기방위력 정비계획 기간 동안에는 예산을 3조5천5백억엔을 증가시켜 차세대전투기(F-SX), 공중급유기, AWACS기 등을 증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중 AEGIS함과 AWACS기의 도입은 정보전, 전자전에 대비한 일본의 안보구상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고속증식로 및 신형전환로 개발이라는 명분으로²⁹⁾ 100톤의 플루토늄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³⁰⁾ THAAD체제의 도입을 추진³¹⁾하여 중국을 자극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나온 신안보선언과 방위지침개정은 주변국들의 우려를 자아내기에 충분하였다. 사실 일본은 미국 일변도의 안보정책을 추진하여 왔으나 최종적 선택은 유보하는 ‘전략적

28) 일본 내의 보수화 경향은 오키나와 주둔 미군의 여고생 성폭행 사건으로 폭발하였는데, 최근에 나카소네 전 일본수상은 이러한 미국에 대한 불만을 달래기 위하여 주일미군을 “집지키는 개”에 비유한 바 있다. 「조선일보」(1997. 10. 7)

29) 일본의 핵부장과정은 독특한 일면이 있다. 현재는 중단되고 있지만, 일본이 다량의 플루토늄을 도입했던 명분은 문주와 후젠지역의 고속증식로와 신형전환로 개발이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고속증식로는 프랑스의 Superphoenix가 실패한 바 있어 과학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판정이 나왔던 상황이었다. 결국 일본은 잉여 플루토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러한 명분을 제시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추세라면 일본은 2010년 이전에 핵국가에 편입될 가능성도 있다. 이는 일본이 핵탄두를 제외한 다른 요소들을 구비함으로써 실질적인 핵무장을 하는 과정을 밟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인데, 이를 “무중후적 전략”이라고 한다. 이에 관해서는 김태우, “핵확산이론과 한국 핵무장의 이론적 당위성,” 「국방논집」, 11호(1990년 가을), pp. 149-172 참조.

30) 결국 일본은 문주 원전의 가동을 중지하고 이 고속증식로 계획을 백지화로 돌렸던 예에서 보면, 일본의 기술개발이라는 명분이 의심받기에 알맞은 형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관한 기사자료는 「조선일보」(1997. 10. 2) 참조.

31) THAAD체제의 도입은 북한의 노동1호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일본은 주장하고 있는데, 실제 일본 방위청은 북한의 노동1호 실전배치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동아일보」(1997. 9. 23) 참조.

모호성'은 견지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신안보선언과 방위지침개정은 일본이 전략적 모호성을 포기하고 완전히 미국 편에 선다는 것을 의미하는 바, 일본 정부로서 부담스러운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이 이렇게 부담스러운 선택을 한 이유는 미국이 빠져나간 힘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후계세력으로 점지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은 이렇게 미·일 안보관계의 심화를 통하여 정상국가론을 실현하면서도 동시에 주변국가들과의 국제관계는 심화시키고 있다. 전방위외교, 정경분리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일본답게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발전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이 보이고 있다. 하시모토 총리는 금년 9월초 장쩌민 중국주석과의 베이징 정상회담에서 미·일 방위지침개정이 대만과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님을 역설하고 안보교류 활성화를 제안³²⁾하였고, 11월 초 열린 러시아 대통령과의 크라스노야르스크 '노타이 정상회담'에서 북방영토문제의 전향적 검토와 2000년까지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노력경주를 합의한 바 있다.

결국 일본은 미국에게 밀착하여 전략적 모호성을 포기하였지만, 그로 인한 부담을 양자 또는 다자관계의 발전을 통하여 완화하려는 제스처를 보이고 있는데,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일본이 안보협력의 다각화를 모색하기 위한 여유를 찾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즉 일본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미·일·러 안보대화에 부가하여 미·일·중 안보대화를 추진하고 있는 바, 이는 일본의 전략적 모호성 포기가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님을 중국에게 설득하는 동시에, 이 두가지의 안보대화를 기반으로 동북아 안보기구로 확대하려는 장기적 포석을 가지고 있다.³³⁾

4. 러시아

러시아는 국내정치경제적인 이유로 인하여 동북아 안보관계에 있어서 영향력을 상실한 상황에 와 있다. 그러나 유럽지역에서 NATO의 확대에 인하여 안보영향력이 감소되고 있으며 미국의 유일패권질서를 앉아서 볼 수 만도 없는 입장이다. 그에 따라 1996년 브리자코프 외무장관을 통하여 '다극적 세계질서'를 천명하고 러시아를 포함하여 미국, 일본, 유럽연합, 인도 등이 중심이 되는 다극체제 형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특히 최근의 이라크 사태에서 미국과 이라크 간 무력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재활동을 한 러시아의 면모는 이러한 노력과 백락이 닿아있는 것이다.

동북아지역에 있어서 러시아는 중국과의 국경문제를 국내 및 지방정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완전타결하고 전략적 제휴관계를 확립하였고, 일본과의 관계 개선과 경제협력 강화를 모색하고 있으며, 특히 북한과의 안보관계를 1991년 수준으로 회복하기 위한 움직임도 탐지되고 있다. 결국 러시아는 유라시아 국가로서 동북아에서도 영향력의 일단을 확보하기 위한 안보협력 및 경쟁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2) 이 제안은 97년 11월 30일-12월 2일 타이 광둥이 중국 인민해방군 부참모장의 일본 방문시 규마 후미오 일본 방위청장관, 나쓰카와가즈야 일본통합막료회의의장, 가토코이치 자민당 간사장 등과의 회합에서 양국 국방장관과 군 총참모장의 교환방문 합의로 귀착되었다. 이에 관한 자료는 「조선일보」(1997. 12. 3) 참조.

33) 미·일·중 삼국의 안보대화는 일본에서 구상 중인 것으로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상설기구의 필요성에 삼국의 의견이 일치했다는 보도가 있다. 「明報」(1997. 9. 28), 「日本經濟」(1997. 10. 5) 참조.

V. 동북아 안보관계 변화의 특징

동북아의 경우, 유럽과는 달리 국제적 제도화 또는 조직화의 정도가 매우 낮은 상황에서 양자관계에 의하여 지역국제관계가 규정되어 왔으며, 따라서 탈냉전의 새로운 구조가 정착되는 데에는 상당한 시차를 보이고 있다. 과거 냉전기에는 북방삼각 대 남방삼각의 대결구조가 정착되어 있었다.³⁴⁾ 1968년 이후에는 중국과 소련의 관계악화로 인하여 전략적 삼각관계의 중심이 소련의 패권주의에 대한 공동전선 수립으로 이동하여 미, 중 간에 대당뜨가 이루어지기는 하였지만 기본적으로 북방삼각 대 남방삼각의 대결구조라는 데에는 커다란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소련의 해체되고 북한 핵문제가 국제적 현안으로 부각되면서 동북아의 국제관계 구조도 변화를 겪고 있다. 소련은 사회주의 종주국으로서 세계공산주의운동의 본산이었으며, 소련의 군사력은 미, 일 뿐만 아니라 중국에게도 위협적인 존재였다. 그러한 소련이 보수공산세력에 의한 꾸데타 실패로 인하여 공산정권이 붕괴하고 소련 연방을 구성하던 공화국들이 분리독립하여 그 이전보다는 훨씬 느슨한 독립국가연합으로 재편되면서 대결구조의 북방삼각 골간이 와해되었다. 또한 1989년 12월 냉전 종식 이후 표면화된 북한의 핵문제는 미국의 핵확산금지체제 확립 정책과 맞물리면서 국제적 현안이자 동북아의 지역현안으로 부각되었는데, 제네바합의와 쿠알라룸푸르 합의를 거쳐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주도에 의하여 한국형 경수로가 공급되는 과정에서 미·북한 간 직접협상, 일·북한간 수교문제 등이 제기되면서 남방삼각관계도 이완되고 있다.

물론 한국의 북방정책 성공에 의한 한·소, 한·중 수교, 소련의 경제사정 악화에 의한 대북한 경화결계 요구, 조·소 우호원조조약의 파기, 중·북한관계의 냉정한 거래관계로의 변화 등 북방삼각 내의 변화와 미·일 간 무역마찰, 한·미 간 무역마찰, 북한에 대한 공조관계의 이완 등 남방삼각 내의 변화도 남북방삼각의 대결구조를 와해시킨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동북아 안보관계의 특징은 몇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³⁵⁾ 첫째 동북아 강대국은 전반적으로 병력수는 감축하면서도 이를 기술력 증대를 통하여 보완하고 있다. 미국, 중국은 병력수는 감축하였지만 무기체계의 능력은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일본의 무기체계 능력 강화는 중국과의 경쟁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둘째 동북아 국가들 간의 군사안보관계는 당분간 다변적 공존관계로 안정화될 것이다. 냉전기의 대결구조가 깨어지고 특정국가를 가상적으로 하는 고정적인 군사동맹은 사안별로 또는 상황에 따라서 임기응변적으로 연합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 따라서 협력과 견제가 복합된 안보관계가 교차하면서 동북아 국가들간의 관계가 중첩되는 다변적 공존관계가 안정화될 것이다. 셋째 지역안보의 불확실성은 증가되고 있다. 불확실성이란 미래에 대한 기대와 현실의 괴리에서 발생한다. 현재의 변화는 과도기적 변화이고 따라서 그 귀결점은 각국가들의 역량과 의지에 따라서 결정될 것인 바, 여기에는 세력균형 재편과정에서의 불확실성, 역내분쟁의 심화로 인한 불확실성, 역내국가들의 국내정치 불안정으로 인한 불확실성 등이 존재한다.

34) 김일평, “주요 강대국들과 한반도 삼각관계,” 존 설리번, 로버타 포스 공저/최봉대 역, 『두개의 한국, 하나의 미래?』(서울: 정계, 1988), pp. 174-194.

35) 김주홍, *op. cit.*, pp. 232-238.

VI. 미·일·중 안보협력 가능성

단위개념의 혼재, 갈등형식의 변화, 폭력효용의 상대적 감소 등의 새로운 세계질서의 특징들은 동북아 지역에도 반영되면서 국가들간의 관계의 균형이 모색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사항들을 고찰해 보면 동북아의 안보는 지역국가들의 협력과 경쟁에 의하여 그 향배가 결정될 것임을 알 수 있다. 현재 유럽지역에서는 NATO라는 단일동맹체에 의한 안보협력이 강화되고 있으며, 지역안보를 상당한 정도로 안정시키고 있다. 그렇다면 동북아지역에서, 특히 미국, 일본, 중국 간의(또는 러시아와 한반도를 포함한) 안보협력의 가능성(또는 안보협력체의 결성가능성)이 있겠는가?

안보협력이란 공동의 안보목표가 존재하는 경우에 거론될 수 있고, 달성될 수 있는 것이다. 유럽지역에서 NATO와 OSCE에 의한 안보협력이 달성될 수 있는 것은 오랜 동안의 국제제도적인 노력이 축적된 결과로 가능했던 것이다. 즉 냉전시대에 NATO와 WTO 간의 끊임없는 대결과 군축협상은 유럽국가들 간의 협상과 타협의 분위기를 정착시킬 수 있었으며, 특히 고르바초프의 '산사고외교'와 '유럽공동의 집' 정책 등은 이러한 분위기를 더욱 고양하였다. 또한 사회주의권 붕괴와 소련 해체 이후 유럽지역에서의 안보적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새로운 안보체제에 대한 모색이 가능했으며, 더욱이 미국과 전략적 상충을 보이는 국가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말하자면 안보협력을 위한 조건이 유럽지역에는 존재해 왔으며, 현재도 유지되고 있다는 말이다.

이에 비하여 동북아는 국제제도화의 수준이 유럽에 비하여 매우 낮은 편이다. 냉전 기간 동안에는 물론 그 이후에도 집단안보적인 제도화의 움직임은 거의 없었으며, 다만 한·미 상호방위조약, 미·일 상호방위조약, 조·중 상호우호원조조약, 조·소 상호우호원조조약 등 쌍무적인 관계에 의하여 안보협력관계가 유지되어 왔을 뿐이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점으로 인하여 탈냉전 이후에도 냉전적 구조가 잔존하였던 것이며, 지역국가들 간의 집단안보의 가능성이 거의 보이지 않았었다.³⁶⁾

현재에도 미·중·일 3국간에는 미묘한 안보이익의 갈등이 존재하고 있다. 미국은 장기적으로는 동북아지역에서 상징적인 군사력만을 주둔시키고 가능하면 군사적 개입을 피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공백의 대리국가로 일본을 지명하였으며, 일본도 자국내의 보수화에 편승하여 미국의 요구를 기꺼이 수용하면서 전략적 모호성을 포기하는 적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미국은 QDR에서 나타났듯이 21세기의 경쟁자로 중국을 지목하고 중국에 대한 견제책을 강구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15전대에서 보았듯이 21세기 초강대국 건설을 위한 거대한 발걸음을 시작하였다. 덩샤오핑 사후 중국의 천하대란과 대분열을 예측했던 미국 학계의 통설을 무색케 할 정도의 정치적 안정을 구가하면서, 경제발전에 안보가 장애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적극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미국과의 적극적인 대결정책은 피하고, 대신 WTO가입에 대한 미국의 협력, 미국시장에서의 중국의 이익 확대를 위하여 경쟁적 협력관계를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의 대리국으로서 일본의 역할이 강화되는 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다. 특히 일본이 미국과 공동으로 THAAD를 개발, 도입하려고 할 때, 전략무기 강화로 대응하겠다

36) 고르바초프의 블라디보스톡 선언, 그라스노야르스크 선언, 노태우 대통령의 동북아 6자회담 제의 등은 이러한 맥락의 제안들이었으나, 가장 중요한 미국에 의하여 외면당하였다. 이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우려를 점하고 있는 동북아에서 굳이 다자 관계를 통하여 동북아지역을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이다.

는 강경한 입장을 취한 바 있으며, 신안보선언과 미·일 방위지침개정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한 공중급유기 도입, 항공모함 도입 등으로 장거리 군사능력을 강화함으로써, 일본의 군사력 강화와 미·일 안보협력 강화에 대응하고 있다.

일본은 국내 보수화 경향의 강화 움직임과 그에 편승한 '정상국가본'에 입각한 재무장 및 미국의 동북아시아 대리국으로서의 역할 강화를 연결시켜 교묘한 방식으로 정치군사대국으로의 발돋움을 시작하고 있다. 이는 UN에서의 PKO활동 적극 참여, 안보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 미·일 방위지침 개정 등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특히 군사적으로는 정보전, 전자전 능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막강한 경제력을 기반으로 중국과의 군비경쟁을 서슴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러시아와의 관계를 개선하면서 북방4개도서 문제와 평화조약결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가 하면, 중국에 대해서도 미·일 안보협력 강화가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님을 설득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볼 때, 미·일·중 삼국의 안보협력관계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동북아시아에 있어서 미·일·중 3국의 안보협력을 위한 조건이 결여되고 있다는 것이다. 안보협력에는 구체적으로 과거 소련의 위협과 같은 공동의 군사적 위협이 존재해야 하는데, 탈냉전과 소련의 해체로 그러한 위협은 사라지고 없다. 뿐만 아니라 유럽과 같이 오랜 동안 경쟁과 협상이 동시에 진행되어 온 경험도 없다. 또한 미국은 21세기의 잠재적 도전국으로 중국을 상정하고 이에 대한 견제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미국의 탈동북아를 대비하여 일본을 대리국으로 양성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 사이에는 과거역사로 인한 불신이 존재함은 물론, 조어도 등에서의 영유권 분쟁이 있다. 즉 미·일·중 3국에게는 전략적 입장의 차이가 명백하고, 또한 과거역사의 해석과 영토분쟁과 같은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갈등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미·일·중 3국간에 전략적 차원의 적극적 안보협력은 21세기에도 별로 가능해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전술적 변용에 의한 사안별 또는 상황에 따른 임기응변적 안보협력 가능성은 얼마든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3국 간에는 이데올로기적인 대립이나 체제경쟁과 같은 총체적 대결구조가 이미 존재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정세의 불안정은 3국이 모두 피하고자 하는 것이니 만큼, 우발적인 오해와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은 상호간에 손해가 날 것이 없기 때문이다. 즉 미·중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정상회담의 정례화, 직통전화 개설 및 각료급 상호방문 등과 중·일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중·일 안보교류 활성화 등은 3국간의 긴밀한 안보 대화 통로를 열었다는 의미가 있는 만큼 동북아시아에서의 돌발사태에 대한 협의와 공동대처의 기초가 마련된 것이다. 예컨대 북한의 무력도발, 북한 정권의 붕괴, 대량난민 발생 등과 같이 정치적인 격변이 발생하거나 관련국가들 간의 우발적인 충돌 또는 해난구조 등의 긴급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과거보다는 원활한 협력이 가능할 수 있다. 하지만 인권문제, 대만문제, 군비감축문제, 집단안보문제, 영유권문제 등 정치군사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있어서는 그러한 협력이 기대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미·일·중 3국의 안보협력은 기본적으로 협력적 견제에 입각할 것이며, 따라서 적극적 안보협력으로 나아가기보다는 임기응변적 협력에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VII. 결론: 한국의 안보에 대한 함의

21세기에 동북아 3강국 간의 안보협력이 적극적인 수준으로 나아가든 또는 임기응변적 수준에 그치든, 그 자체로 한국에게는 안보정책에 어떠한 선택을 강요하는 상황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던 내용들은 크게 보자면 상황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나타내는 것이다. 변화에 대한 적응이 성공적이나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 한국의 안보정책의 성패가 결정된다.

현재의 협력적 견제에 입각한 미·일·중 3국의 안보관계는 21세기에든 계속될 것이다. 남북방 3강대결체제가 와해되고 난 이후에도 한국의 안보정책은 대미 일변도로 지속되어 왔지만, 미국의 한반도 정책은 한국 일변도로 지속되어 오지 않고 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도 억지 및 봉쇄(deterrence and containment)를 지양하고 개입 및 확대전략을 적용하여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한국과의 공조는 희생을 감수하고 있다. 또한 일본도 북한과의 수교를 추진하면서 가능한 한 북한에 대한 선점, 심지어는 한국보다도 먼저 북한에 들어가서 기득권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으로 나아가고 있다.³⁷⁾

따라서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에는 무엇인가 변화가 있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 21세기에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안보정책 기초를 설정하자면, 이는 “참여와 균형”(participation and balancing)이 되어야 할 것이다.³⁸⁾ 현재 불확실성을 동반하면서 태동하고 있는 새로운 질서는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국가들의 의사를 중심으로 형성될 것이며, 따라서 한국의 참여는 당연하면서도 절박한 것이다. 세계적 규모에서 한국의 영향력은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지만 동북아지역의 새로운 질서형성에 있어서는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자국의 국가이익을 능동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동북아 지역의 새로운 지역질서, 즉 안보협력체의 설립과 운용에 관한 주도적 역할을 비롯하여 안보질서의 국제적 제도화를 위한 적극적인 참여를 모색하여야 한다. 현재 미·일·러 삼국의 안보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미·일 방위지침 개정을 계기로 미·일·중 안보대화가 모색되고 있으나 한국이 빠지고 있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한편 한국은 국제적 위상과 한반도의 지정학적·지전략적 상황을 고려하여 균형을 지향해야 한다. 균형이라 함은 미국 일변도의 의존적 안보정책에서 탈피하여 단다극체제에서 한국의 국가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의 기초를 재조정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현상타파에 따르는 부담이 수반되는 만큼 주변국가들과의 선린우호관계 증진이 필요하다. 사실 한국의 미국 일변도 안보정책은 해방과 냉전이라는 역사적 상황에 의하여 강요되었던 것으로서, 이제 그 정책적 효용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 되었다. 미국조차도 봉쇄와 억지(containment and deterrence)에서 개입 및 확대로 정책기조를 재조정하였다. 과거식의 안보정책에서 탈피하여 미국은 심지어 일본을 동북아의 미국 대리세력으로 양성하고, 중국을 견제하고 있으며, 북한핵문제와 식량문제 처리과정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남북한 사이에서 상당한 정도로 한국을 이용하고 있다. 이는 상황이 그만큼 변화되었으며 따라서 변화된 환경에 대한 새로운 형태의 적응이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한국이 여전히 봉쇄 및 억지에 입각한 안보정책, 대북정책을 지속한다면 이러한 적응의 과정에서 낙오하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37) 김주홍, “북한체제의 변화에 대비한 한국의 북한관리방안,” 『북한체제의 변화가능성과 우리의 대응』(울산대학교 주최 제7회 통일심포지움, 1997. 11. 4), pp. 43-68.

38) 같은 논지의 글은 다음을 참조. 신정현, “한국의 안보환경과 국방태세,” 『국가발전을 위한 국방역할의 재조명』(한국국방정책학회 97 정책토론회, 1997. 7. 4), pp. 1-20.

궁극적으로는 동북아 5각체제의 균형자적 위상을 지향하되 단기적으로는 미국에 편승하는 정책을 유지하면서, 중기적으로는 중국과 일본의 세력균형에서의 균형자(balancer)로서의 위상 확보를 위한 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한국은 동맹정책을 포함하여 한반도 평화체제, 대 주변국 안보정책 등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야 한다. 특히 정신없이 변화하는 동북아 국제안보관계 속에서 자칫 “직 개념”에 혼란이 올 가능성이 있다. 적개념에 혼란이 올 경우 구한말과 같이 우리의 정체성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으며, 강대국들의 흥정에 세물이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대한 확실한 중심을 잡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³⁹⁾

참 고 문 헌

- 강성학, “한반도 주변 전략환경과 미국의 역할 - 미국은 사이저인가 아니면 이야기인가?,” 『한국정치학회보』, 제30집 3호(1996 여름), pp. 265-286.
- 김일평, “주요 강대국들과 한반도 삼각관계,” 존 설리번, 로버타 포스 공저/최봉대 역, 『두 개의 한국, 하나의 미래?』(서울: 청계, 1988), pp. 174-194.
- 김주홍, “새로운 국제군사질서와 동북아 국제정치군사관계,” 김주홍 외(공저), 『신국제질서의 도전과 대응』(울산대학교 출판부, 1996), pp. 195-198.
- 김주홍, “북한체제의 변화에 대비한 한국의 북한관리방안,” 『북한체제의 변화가능성과 우리의 대응』(울산대학교 주최 제7회 통일심포지움, 1997. 11. 4), pp. 43-68.
- 김태우, “핵확산이론과 한국 핵무장의 이론적 당위성,” 『국방논집』, 11호(1990년 가을), pp. 149-172
- 박상섭, “근대국가의 군사적 기초: 근대국가 형성기 유럽의 군사와 정치,” 『정경세계』(1991년 봄호), pp. 281-403
- 신정현, “한국의 안보환경과 국방태세,” 『국가발전을 위한 국방역할의 재조명』(한국국방정책학회 97 정책토론회, 1997. 7. 4), pp. 1-20.
- 신정현, 김주홍 외(공저), 『21세기 한국의 선택: 국가체제와 정책과제』(서울: 우석, 1998).
- 이용희, 『일반국제정치학』(상)(서울: 박영사, 1980).
- 하영선, “탈냉전 군사질서,” 하영선 편, 『탈근대지구정치학』(서울: 나남, 1993), pp. 73-119.
- 「조선일보」
 「동아일보」
 「明報」
 「日本經濟」
 「讀賣新聞」

Raymond Aron, *Peace and War*(New York: Doubleday, 1966).

Robert Axelrod, *Evolution of Cooperation*(New York: Basic Book, 1984).

Roger G. Brown, “Chinese Politics and American Policy: A New Look at the Triangle,” *Foreign Policy*, 23(Summer, 1976), pp. 3-24.

39) 신정현, 김주홍 외(공저), 『21세기 한국의 선택: 국가체제와 정책과제』(서울: 우석, 1998), pp. 493-507.

- Ashton B. Carter, William J. Perry, John D. Steinbruner, "A New Concept of Cooperative Security," *Brookings Occasional Papers*(Washington D.C.: The Brookings Institution, 1992).
- Barber B. Conable, Jr, and David M. Lampton, "China: The Coming Power," *Foreign Affairs*, 72/5(Winter 1992/93), pp. 133-149.
- Karl W. Deutsch and David Singer, "Multi Power System and International Stability," *World Politics*, 16(April 1964), pp. 390-406
- Lowell Dittmer, "The Strategic Triangle: An Elementary Game-Theoretical Analysis," in Klaus Knorr(ed.), *Power, Strategy and Security*(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3), pp. 37-102
- John L. Gaddis, *The Long Peace: Inquiries in the History of the Cold War*(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7).
- Banning Garrett, "China Policy and the Strategic Triangle," in Kenneth A. Oye, Donald Rothchild and Robert Lieber(eds.), *Eagle Entangled: U.S. Foreign Policy in a Complex World*(New York: Longman, 1979), pp. 228-264.
- Robert Gilpin, *U.S. Power and the Multinational Corporation*(New York: Basic Books, 1975).
- Thomas Gottlieb, *Chinese Foreign Policy Factionalism and the Origins of the strategic Triangle*(Santa Monica: RAND R-1902-NA, November 1977).
- Wolfram Hanrieder, "Dissolving International Politics: Reflections on the Nation-Stat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2/4(1978), p. 1276-1288.
- F. H. Hinsley, *Power and the Pursuit of Peace: Theory and Practice in the History of the Relations between States*(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3).
- K. J. Holsti, *Peace and War: Armed Conflict and International Order 1648-1989*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1).
- Samuel P. Huntington, "The Clash of Civilizations?" *Foreign Affairs*, 72/3(Summer 1993), pp. 22-49
- Independent Commission on Disarmament and Security Issues, *Common Security: A Blue Print for Survival*(New York: Simon and Shuster, 1982).
- Paul Kennedy, *Preparing for the Twenty-First Century*(New York: Random House, 1993).
- Robert Keohane and Joseph Nye, *Power and Interdependence*, 2nd ed.(Glenview: Scott, Foresman and Company, 1989).
- Klaus Knorr, "On the International Uses of Military Force in the Contemporary World," *Orbis*, 21/1(1977), pp. 5-27.
- David C. Korten, "Sustainable Development," *World Policy Journal*, 9/1(Winter 1991-1992), pp. 157-190.
- Nicholas D. Kristof, "The Rise of China," *Foreign Affairs*, 72/5(Winter 1993/93), pp. 59-74.
- Lawrence Martin, "The Utility of Military Force," *Adelphi Papers*, 102(1973), pp. 14-21.
- John Mearsheimer, "Back to the Future: Instability in Europe after the Cold War,

- International Security*, 15/1 (Summer 1990), pp. 5-56.
- George Modelski, *Principles of World Politics*(New York: Free Press, 1972).
- Clark A. Murdock, "Economic Factors as Objects of Security," in Klaus Knorr and Frank Trager(eds.), *Economic Issues and National Security*(Lawrence: Regents Press of Kansas,1977), pp. 67-98.
- William H. Overholt, *China: The Next Economic Super Power*(London: Weidenfeld & Nicolson, 1993).
- Gareth Porter and Welsh Brown, *Global Environment Politics*(Boulder: Westview Press, 1991).
- Richard Rosecrance, "A New Concert of Powers," *Foreign Affairs*, 71/2(Spring 1992), pp. 64-82.
- Richard Smoke and Alexander Kortunov(eds.), *Mutual Security: A New Approach to Soviet-American Relations* (Hampshire: Macmillan and Academic Professional Ltd., 1991).
- Glenn Snyder, "'Prisoner's Dilemma' and 'Chickens' Models in International Politics,"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15/1(1971), p. 66-103.
- Michel Tatu, *The Great Power Triangle: Washington-Moscow-Peking*(Paris: Atlantic Institute, 1970).
- U. S. Department of Defense, *A Strategic Framework for the Asian Pacific Rim: Looking toward the 21st Century*(Washington, D.C.: GPO, 1990).
- U. S. Department of Defense, *A Strategic Framework for the Asian Pacific Rim*(Washington, D.C.: GPO, 1992).
- U. S. Department of Defense, *Report on the Bottom-up Review*(Washington, D.C.: U.S. GPO, October 1993).
- U. S. Department of Defense, *Annual Report*(Washington, D.C.: U.S. GPO, March 1995).
- Kenneth Waltz, "The Stability of a Bipolar World," *Daedalus*, 93(Summer 1964), pp. 881-909.
-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Our Common Future*(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7).